

#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그에 대한 현재적 논의

오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1. 서론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과연 달성 가능한 일일까? 인류의 지난한 갈등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평화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 것일까? 어떤 이들은 전쟁을 극단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사회의 정화 기능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전쟁이 가져다주는 실존적인 상황을 예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상태의 대립항으로서의 전쟁상태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역으로 평화상태를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유만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바람직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 평화가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면, ‘영원한’ 평화 역시 인류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영원한 평화는 어떤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일까? ‘평화’ 상태에 대한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해서, 평화의 주체(개인과 개인, 국가 간, 개인과 국가 등) 뿐만 아닌, 평화의 양상(영원한 평화, 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 개인 간의 분쟁의 종식), 그 적용 범위(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전 세계까지)도 제각각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논의할 평화는 각 행위주체들 사이의 관계에

서 형성되는 평화이며, 그 범위는 전 세계적인 평화이다. 세계의 어느 한 일부에서 평화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일부의 평화는 결코 ‘평화’롭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전쟁 압박과 불안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구평화’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논의를 필연적으로 포함해야만 한다.

이러한 거대한 문제에 대해 답을 하려는 사상가들은 칸트 이전에도 존재했다. 칸트보다 더 앞 시기의 푸펜도르프, 그로티우스 등의 학자들은 대개 ‘국제법학자’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여 불린다. 이들은 국제법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단지 일시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변하지 않았을까? 칸트가 보기에 이들의 법은 잠재적 전쟁의 중단에나 기여할 뿐,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을 위한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칸트의 정치철학은 사회계약론 전통 중에서도 루소적인 전통 위에서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각 개인이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일반의지를 수립하며 이 일반의지에 따르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담고 있다. 여기서 ‘자연 상태’로부터 ‘공법의 지배’로의 이행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차원에서는 평화를 정초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관계—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평화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루소는 국가 위의 또 다른 계약체인 “국제 국가”를 이론적으로 배척하고 있지만, 다른 체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칸트는 루소가 하지 못했던 작업을, 그의 『영구평화론』을 통해 수행한다. 그는 국제관계에 기초한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해 공법(公法)의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칸트는 평화상태가 수립되지 않은 ‘자연상태’로부터 평화상태로의 이행, 평화상태를 영원히 보증하는 원리를 밝혔다. 우리는 『영구평화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평화가 필요한 것인가? 자연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평화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연상태에서 평화상태로의 이행은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장치를 통해 일어나는가? 그 장치가 힘을 갖게 되는 보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칸트의 주저에 비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요청이 강력해졌다. 현대 사회에서 국제기구가 현실화되고, 국제적 평화의 이념이 중요해지면서 『영구평화론』은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구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요청이 강력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기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구성해봄으로써, 칸트의 구상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칸트 스스로가 서문에서 경계했던 것처럼, 이 거대한 기획이 철학자들의 탁상공론으로만 치부될 것인지, 현실적인 실재성을 인정받아 평화를 위한 공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 2. 『영구평화론』의 체계 및 구성

『영구평화론』은 기본적으로 ‘조항’의 형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항이란 법률에 존재하는 형식으로, 어떤 원리나 원칙을 간단한 문장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뒤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만, 칸트의 ‘조항’은 ‘공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칸트의 영구평화의 기획을 잘 드러내주는 이러한 조항들(예비 조항, 확정 조항, 추가 조항)이 ‘필연적’으로 조항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겠으나, 조항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법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구평화론』에는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확정 조항, 추가 조항

등이 의미 있는 분류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을 서문, 예비 조항, 확정 조항, 추가 조항, 부록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추가조항의 ‘자연이 영구평화를 보증함’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칸트의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의 원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전체 체계를 조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칸트의 체계를 따라 예비, 확정, 추가 조항, 부록의 순서로 텍스트를 분석해나갈 것이다. 주목할 것은 각각이 『영구평화론』 전체에서 갖는 위상과, 그에 따른 순서이다. 예컨대, 예비조항은 왜 ‘예비’ 조항인지, 어떤 이유에서 확정조항 앞에 나와야만 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2.1 ‘자연’과 ‘자유’의 영역, 그리고 그에 기초하고 있는 영구평화에 대한 가능성<sup>1)</sup>

인간은 왜 영구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는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그의 철학적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답이 가능하다. 칸트의 도덕 법칙은 행위의 동기—선의지—를 중시한다는 측면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말로 거칠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칸트에게 있어 선의지란, ‘옳은 행위를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추구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 선의지가 지향하는 것에는 ‘옳다’라는 판단이 선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옳음’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도덕법칙이 선행하고 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실천이성비판』, V30)

1) I.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5의 본문 및 역자 백종현 교수의 해제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대개 자연적 경향성(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추구하는 동물적인 인간의 속성)과는 어긋나며,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강제적인 규범이자 ‘의무’이다. 칸트는 이를 “정언명령”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대한 욕구가 무엇보다도 강력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욕구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언명령에 따른다면, 결코 타인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쟁’을 생각해보자. 전쟁상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버리고, 어떤 거대한 원리—이념, 국가, 이해관계—에 의해, 단지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상태이다. 하지만 칸트는 인간이 단순한 수단으로만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윤리형이상학 정초』, Gr. BA 66=499)

즉, 칸트가 제시하는 정언명령의 판단에 따르면,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전쟁상태를 지양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도덕적 의무 역시 부여받게 된다.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함은 극히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의지—도덕법칙—는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 자유를 통해 ‘도덕’이라는 인간의 실천적 행위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 속해 있으며, 그의 행위 역시 자연의 세계 내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세계가 오로지 자연(기계론적인 자연)의 총체로만 이해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인간의 행위에는 자연적 경향성(기계적 자기애와 동물적 욕구의 충족)과는 다른 영역의 실천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행위—즉 도덕적 행위—가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행

위를 가능케 하는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음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자연적인 세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속한다면 기계론적 필연성의 영향력 아래 지배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영역 밖의,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다. 자연의 세계와 구분되는 이 세계를, 우리는 ‘도덕의 세계’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칸트의 실천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란 인간이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당위이자 의무인 것이다. 역으로, 전쟁이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양해야 하는 상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영구평화를 추구하는 것’의 정당성과 그 가치가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성이 잘 발현되고 계발되어 모두가 도덕 법칙의 부름에 응한다면, 굳이 『영구평화론』의 기획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이겨내고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원리적인 선언만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원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법률은 인간을 규제하는 현실적인 강제력이며, 인간의 행위를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장치이다. 인간은 법률의 보편성의 이념 하에 평등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법률은—적어도 그 기본 정신만큼은—인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도덕 법칙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복종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제적 삶을 규제하는 장치로서의 ‘법률’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때문에 칸트의 영구평화론 역시 법률 혹은 법 조항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자연은 오직, 인간이 전쟁의 포화와 고통의 속박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하기만 하는가? 『영구평화론』에서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은, 기계론적인 자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은 그 나름대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기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 이 자연은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

다. 자연은 ‘기계적 필연성’이 아닌, ‘합목적성’을 고려하는 자연이며 때문에 필연성에 따른 ‘운명’이 아닌 ‘섭리’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위해, 예술행위를 유추해봄으로써(혹은 창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섭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실천이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도덕적 목적과 예술행위와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초경험적인 것이지만,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교조적이며 그 실재성이 잘 정초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sup>

위대한 설계자인 자연은 ‘예비적인 설계’를 통해 인간이 영구평화로 나아갈 토대를 제공하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준다. 자연의 예비적 설계는 다음과 같다.

- (1) 자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 (2) 전쟁을 통해 모든 지역에, 극히 불모의 지역에까지 인간을 쫓아 보내 그곳에 살도록 하였다.
- (3)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해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 간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했다.

자연은 인간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니 생활해야만 하도록 강제했다. 그 강제의 기제는 전쟁이었다. 전쟁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기인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는 자연적 경향성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은 이 예비적 설계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한다. 그 설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을 분석한 뒤 추가조항 분석에서 살펴 볼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연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인간은 도덕적인 이유에서 결코 전쟁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위협이 사라진 ‘평화 상태’로의 이행을 의무로서 행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정초(Stiftung)된 영원한 평화를, 예비적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2) 합목적적 자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이루어진다.

『영구평화론』은 이러한 자연과 자유의 체계 속에 자리하고 있다.

## 2.2 예비적 조항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적 조항은 말 그대로 ‘예비적’인 조항이다. 이는 확정조항의 선결과제로서, 확정조항이 안정된 토대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금지조항**들이다. 예비조항에서 확정조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필연성’의 구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예비적 노력은 조항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의 관계를 필연성의 모습에서 파악하기보다는, 확정조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예비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괴,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영구평화를 위해 이 법칙들이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들은 객관적인 실천적 필연성의 원리를 담지하고 있는 금지조항으로 인식되지만, 그럼에도 이를 ‘허용법칙’으로 보



는 관용 역시 필요하다. 앞으로의 있을 일들—**취득상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금지가 필요하겠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소유상태**—에 대해서는 법칙의 예외 조항으로 둘 수 있다. 칸트가 금지와 허용을 구별하는 이유는, 자칫 일을 서두르다 영구평화를 놓치게 될 위험이 더욱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조항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항들이기도 하며, 역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가 현실적인 여건을 배려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3 확정 조항

칸트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자연 상태의 모습과 무척이나 유사하다. 자연 상태란 전쟁의 상태이다.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지는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 전쟁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쟁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무법적’ 상태는 개인의 경우라면 모두 함께 시민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법은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속성을 지니므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 모두는 공민적 정치 체제에 속해야만 한다. 그 체제에 귀속될 사람들은 (1) 한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 (2) 국가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법에 따르는 체제 (3) 사람이나 국가가 외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에서는,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에 속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 층위의 법의 분류는 적어도 칸트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며 때문에 이에 바탕하여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들이 구체화된다. 우리는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에서, 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를 각각의 조항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영구 평화를 위한 제1의 확정조항**은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법**—즉 한 국가 안의

시민법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자유의 원리에 의해,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신민으로서는 의존의 원리에 의해, 국민으로서는 평등의 원리에 의해, 이 시민적 체제의 원칙이 확립된다. 칸트는 이러한 자유, 평등, 법에 대한 의존이 가능한 정체는 오직 공화제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의—자유는 ‘권능’이고 평등은 ‘배분적인’—를 가지고서는 어쩌서 이러한 가치들이 영구평화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칸트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이를 설명해주는 친절함을 잊지 않는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는, ‘내가 합의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에도 복종하지 않을 권능’이며 평등은, ‘어떤 사람이 그 역시 구속되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그 법률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시민들 간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자유와 평등은 모두 법률상의 자유와 평등이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자유와 평등은 사람들이 무법적인 자연 상태를 탈피하고, 시민법의 차양 아래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오직 공화제만이 자유, 평등, 의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공화제는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칸트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체의 분류를 시도한다. 공화제는 통치의 형식에 의한 분류로서, 입법부로부터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이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은 전제정체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지배된다. 칸트는 공화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 혹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체제라고 역설한다. 전제정체는 필연적으로 전제나 독단을 야기하며, 정부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논리에 입각해서도 (입법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의지의 집행자일 수 없기 때문) 옳지 않기 때문이다.<sup>3)</sup>

3)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대의’라는 말을 ‘대의 민주주의’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입법권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칸트가 사용하는 ‘대의’는 입법과 집행의 분리 혹은 집행권이 입법권의 의지를 대신 수행한다는 낯

전제적이고 독단적인 정치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자연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때문에 시민적 체제를 수립하고 위 가치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화제만이 가능한 유일한 정치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구 평화를 위한 제2의 확정조항**은 국제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존재함을 현실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4)</sup> 국가들 간의 관계는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의 개인들의 자연 상태와 같아서, 이를 타파하고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만 한다. 이는 ‘국제 국가’가 아닌 ‘국제 연맹’의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국민은 단지 하나의 국민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을 뿐이므로 새로운 입법자와 복종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상 국제법이 그 법원으로 가지는 강제력은 극히 취약하다. 하지만 칸트는 이것을 법 개념에 대한 ‘존경심’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인간에게는 자신 속에서 악의 원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분명 좀 더 커다란 도덕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국가 간의 제약’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통한 보장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연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맹은 영원한 평화를 목표로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조약’과는 다르며, 연맹에 참여한 나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킨다. 연맹의 이념은 점차 확산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영원한 평화를 향한 객관적 실재성은 분명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칸트가 제시하는 ‘국제 연맹’의 형태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위한 다른 정치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역시 ‘국제 국가’로 불린다.<sup>5)</sup> 여기서의 국제 국가는 모든 국민국가를 해체하

스가 강하다.

4) 자연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5) 위 문단에서 언급된 ‘국제 국가’는 각 국가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

고, 전 지구상에 단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굳이 연맹을 택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강제력을 발생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이다. 이는 국제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 ‘세계 공화국’이라는 이념 대신 소극적 대안으로서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다.

**영구 평화를 위한 제3의 확정조항**은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세계 시민’이라 함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외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행위주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연의 섭리에 의해, 세계 공화국을 건설하여 모두가 동일한 국가 내의 동등한 위격을 가진 개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세계 시민법을 통해 개인은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칸트가 오직 ‘우호적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한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선,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교제를 시도하는 것’ 이상의 행위는 주권국가의 존립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인간은 자연적 권리로서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타국에 대한 일시적 방문의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 서로를 서로를 인정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세계 시민법은 시민법과 국제법을 보충해주며 하나의 완결적인 공법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영구평화를 위한 이 세 가지 조항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구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공화제 국가에서부터 시작한다. 국제 연맹은 ‘공화제’ 국가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국제 연맹이 결성되지 않고서는 세계 시민법 역시 상상할 수 없다.<sup>6)</sup> 때문에 각 조항의 순서는, 단순히 사고의 전개과정에 따른 서술이 아니라 이론적인 정합성과 현실적인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타

6) 칸트는 명시적으로 세계 시민법이 두 법률에 대한 ‘보완’의 형식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당하도록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2.4 추가 조항

추가조항은 확정조항의 내용을 보충하고, 영구평화를 더욱 완결적인 체계로 다듬기 위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자연’이 영구평화를 보장해주는 이론적 틀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공법’의 각 분야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법**의 경우, 자연은 ‘존경받고는 있지만 실행능력이 없는 이성’에 의해 정초된 일반 의지에 도움을 준다. 이 도움은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통해 오는 것이다. 이기적 성향이 상호 충돌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하나의 체제를 마련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즉 문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강제적인 법칙에 종속시키는 방식에 의해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적대적인 의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의 기제를 어떻게 인간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법칙이 구속력을 갖는 평화 상태를 어떻게 확립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sup>7)</sup> 이리하여 자연의 기제는 이기적 성향을 통해 이성 자신의 목적인 법의 통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국제법**의 이념 그 자체는 이웃 국가들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국가의 통치 범위가 넓어져 ‘세계 왕국’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법률의 위력은 현저하게 저하 될 것이다. 더구나 자연은 언어와 종교적 차이라는 수단을 통해 민족별로 이를 가르치고, 섞이는 것을 방지한다. 이 경우에 평화는, 모든 힘들의 활기찬 경쟁 속에서의 균형에 의해 초래되고 보증된다. **세계시민법**의 이념은 자연이 가지는 상호이익—즉, 상업적 정신—에 의해 여러 민족을 통합시킨다. 이는 전쟁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쟁을 방지하고 중재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7) I. 칸트, 『영구평화론』, 이한구 역, 서광사, 54p.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게 된다.

추가조항에는 또 하나의 조항인 ‘비밀조항’이 존재한다. 비밀조항은 공법의 ‘공개성’의 원칙에서 생각해본다면 분명 모순된 조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칸트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비밀 조항이란, **“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입법적인 보편적 인간 이성에 의해 의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협약도 국가 간에는 필요하지 않다. 물론 “단지 충고”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라는 표현이, 칸트가 정말 말 그대로 귀를 기울이는 수준으로도 만족할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현실적, 실천적 적용을 바랐던 것인지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2.5 부록 I, II - 도덕과 정치의 통합 가능성

이러한 칸트의 체계에 대해, 혹자는 칸트가 서문에서 경계한 것처럼 ‘이것은 단지 철학자들의 체계이다’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정치와 도덕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주장해버림으로써 그 실천적 난점을 쉽게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에 대한 기획이 도덕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하지만 영구평화에 대한 실제적인 실현은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흔히 떠올리는 ‘정치’란 경험적인 영역의 전유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때문에 도덕 법칙은 현실 정치에서 자주 부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와 도덕을 철저하게 이원화시킨다면, 칸트의 체계는 오직 이론적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영원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과는 요원해지게 된다.

칸트는 도덕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법칙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실천적임을 역설한다. 때문에 실천적인 법의 이론으로서의 정치학과 이론적인 법의 이론으로서의 윤리학 간에는 어떠한 갈등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가

들이 이를 부인함으로써—즉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 라고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두드리진 충동을 보여준다.

실천가들의 말처럼, 설사 각 개인이 각자의 도덕 원칙과 자유의 원리에 의해 행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원한 평화를 위한 체제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직 모두가 그 체제를 ‘의욕’할 때 비로소 ‘사회적 의지’라는 이름으로 총화되는 것이며, 이 힘(의지)의 강제력에 의해 공법의 법률적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법의 체계는 명백히 인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도덕법칙의 지배 아래 있으며, 공법과 정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그렇지 않다면, 법은 공허한 사상에 불과하게 된다), 나아가 법이 정치를 제약한다는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정치와 도덕의 통합 가능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칸트는 ‘정치적인 도덕가’와 ‘도덕적 정치가’의 구분을 통해, 인간은 공적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도 법 개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치가 단순히 책략의 술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변한다. 즉, 인간은 공법 개념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칸트는 앞서 제시한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이성의 형식적 원리를, 이성의 실질적 원리(선택 대상으로서의 목적)보다 선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설정하는 목적이 그 자체로서 의무적인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형식적 원리가 선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은 영구평화라는 목적에—즉 이성의 실질적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윤리적 문제’는 그 자체가 의무의 승인에 따른 결과로서 소망되는 것으로서 항상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칸트에게는 “우선, 순수 실천 이성의 왕국과 그 정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앞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준칙은, 오직 정의에 대한 의무의 순수개념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순수한 법적 원리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가정해

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정치는 도덕성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준칙과 도덕 간의 대립은 ‘정치’가 ‘도덕’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는 완만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칸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 간의 조화에 대한 부분’**이다. 칸트는 공법에 있어 모든 경험적인 부분을 사상하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부분은 오직 ‘공개성의 형태’라는 원리라고 한다. 때문에 모든 법, 혹은 법적인 주장은 공개적이어야 하며, 이 원리가 행위자의 원리와 양립 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되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공법의 선험적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칙은 경험적 원리가 모두 사상되었다는 측면에서 ‘선험적 형식’이며, 도덕 법칙으로서 윤리적이며 동시에 인간의 권리와 관계된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칸트는 이 공개성의 원칙을 준거로 하여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에서의 도덕과 정치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법들의 정당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공개성을 띠지 않은 준칙들은 정당하지 못하나, 역으로 공개성을 띤 모든 준칙들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 준칙들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1. 합법적인 상태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2. 모든 정치는 그 법적 토대로서 도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위 두 원칙을 기초로 하여, 칸트는 **“공개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준칙들은 권리와 정치 둘 다와 일치한다.”**는 선험적인 공법의 원리를 도출해낸다. 칸트는 도덕과 정치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도덕이 정치와 대립하는 경우에는 정치가 도덕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순수이성의 형식적 원리에 따름으로써—오히려 그 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영구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 3. 영구평화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 3.1 『영구평화론』의 분류에 관한 문제

기본적으로 『영구평화론』은 ‘조항’의 형태이다. 그렇다면 『영구평화론』이라는 텍스트는 칸트의 법의 필연적인 분류(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칸트는 서문에서 『영구평화론』이 하나의 ‘이론적 기획’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분명 『영구평화론』은 형식적으로 법적인 완결성을 가진 체계이며, 칸트가 자신의 이론 체계에서 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영구평화론』이 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영구평화론』이 ‘공법’임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구평화론』 자체가 법의 분류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나누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의 법이라면 예비조항이나 각 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조항은 내정간섭이 될 것이며, 오히려 내정 불간섭에 대한 조항 자체도 그 효력이 모호해진다. 각 조항마다 적용 영역을 분리하여 생각하더라도, 각각의 조항들이 어떤 법에 기초하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하게 다가온다. 즉, 『영구평화론』이 어떠한 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그 효력조차도 모호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법률’이 아닌, 영구평화를 위한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굳이 칸트가 법조항의 형식을 통해 영구평화에 대한 생각을 개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자연적 차원’에서의 국가들의 힘의 불균형 상태

두 번째는 예비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이다. 칸트는 예비조항의 ‘상비군 폐지’ 조항을 통해 상비군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과, 중상

주의 국가의 축재로 인한 전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확정조항 제 2조항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영구평화를 이루는 초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비군과 축재의 금지만으로, ‘자연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가들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연이 민족과 언어를 통해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위치와 인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민족과 국민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요롭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으며, 다른 민족은 영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빈약할 수 있다. 즉,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은 반드시 상비군, 혹은 중상주의 국가의 축재뿐만이 아닌, 인구나 영토, 자원 등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자연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가들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를 동일한 영토의 크기를 갖도록 자르거나, 민족들을 동일한 인구의 규모로 분할 할 것인가? 이 방법은 예비조항 다섯 번째 ‘내정불간섭’ 조항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를 칸트의 체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 3.3 국제법의 효력에 관하여

국제법의 효력을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국제법은 존재해야 하지만, 국제법이 각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은 이미 원초적인 계약을 통해 자체적인 법률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 연맹에 대해서도,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제 2확정 조항은 국제법이, ‘국제 국가’가 아닌 ‘국제 연맹’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제법이 강제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각 국가들을 일종의 국민으로 가지는 국제 국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강제력을 갖지

8)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이나, 인구 등을 따져 본다면 쉽게 납득 할 수 있을 것이다.

않는 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칸트는 실제로 국제법이 ‘불확실하며, 한갓 말에 불과한 것으로, 바로 그 조문 속에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비밀 유보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조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이다.<sup>9)</sup>

그럼에도 칸트는 국제법을 공법의 필연적인 분류의 체계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특성—보편성, 강제성—을 모두 갖는다고 간주해야 하며, 그 법의 효력 역시 존재한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법’이라는 이름을 달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칸트의 논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의 효력에 대한 논의에 대한 정당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의 효력(Geltung des Rechts)이라 함은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규범력을 뜻한다. 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타당성은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실효성은 법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법의 효력은 1. 타당성 측면에서의 정당화와 2. 실효성 측면에서의 정당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타당성 측면에서, 국제법은 필연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의를 다시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국제 연맹에 기초해야만 한다. 국제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조항이 선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야 하며, 국제 연맹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공화제라는 사실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국가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경주한다면, 과연 국제법이 필요할까? 비록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국제법은 국제법으로서 나름의 필연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국제법은 일종의 계약을 통해 결성된 국제 연맹체를 공고히 하고, 국제 연맹을 하나의 실체적인 존재로 만든다. 국제법은 국제 연맹의 형성과 체계를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틀로서 필연

9) Ibid. 74p.

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 각 국가들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욕구함으로써 국제 연맹이 형성되는 것이며, 법률적 상태를 조성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적 의지의 형성을 통해 국제법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국제법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까? 루소와 칸트 모두 공통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각 개인이 기본적인 사회계약 외에 또 다른 계약을 맺어 이중의 계약 상태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각 국가를 개별 행위주체로 상정하더라도, 국제 국가의 가능성은 부정된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제 연맹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연맹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통해, 혹은 각 국가가 평화를 추구함을 통해 - 그 일반의지의 확보를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각 국가의 주권과 권리를 형성된 연맹체에 양도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국제법에 일종의 ‘강제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때문에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나타나는 국제법의 작동 원리는 오직 도덕 법칙에 입각한 것으로만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영구평화론』 텍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칸트의 이론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국제법의 실효성을 발견할 수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연맹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한, 국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sup>10)</sup>고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연맹이 강제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존재한다. 즉, 연맹에 속한 국가의 행동을 제약할 이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그 국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칸트는 “무법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 상태를 청산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sup>11)</sup>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의 국가를 ‘국제 연맹이 형성되지 않은, 혹은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고 해석할 여지도

10) Ibid. 36p.

11) Ibid. 35p.

충분히 존재한다. 즉,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국제법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제연맹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국제법의 준수 요구 및 강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국제법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겠는가? 국제법이 국제 연맹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제 연맹은 각 국의 주권과 자유를 양도 받지 않은 정치체제이다. 때문에 국제연맹이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칸트가 직접 언급 한 것처럼) 연맹에 가입한 각 국가 간의 ‘활기찬 경쟁 속에서의 균형’을 통해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각 국가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국제법의 강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의 체계에서(또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이 전제된 상태에서) 본다면, 이러한 국제법의 강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국내법에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공화정체의 공법에 대한 존경심 역시 이 법을 (스스로) 강제하는데 큰 힘을 보탬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sup>12)</sup>

이렇게 국제법은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그 나름의 법률적인 효력을 가짐이 입증되었다. 『영구평화론』의 국제법에 대한 논의는 취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게 무너지는 체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영구평화론에 대한 현재적 논의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에 대한 기획은 논리적이고 치밀한 체계이다. 때문에 이론 체계 내에서 생기는 난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칸트가 미처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한 허점은

12)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각 국가의 자연적 경향성-패악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은, 칸트 자신이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칸트가 살았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에만 발견되는 현상을 끌어들이어 칸트를 비판하는 것 역시 옳은 비판이 아니다. 오히려 칸트의 체계를 가장 강력한 형태로서 수용하고, 오늘날에만 발견되는 현상을 칸트 이론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 4.1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영구평화의 양립불가능성

칸트가 살던 시대는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중상주의 경제체제였다.<sup>13)</sup>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제기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오직 상비군과 관련된 부분과, 상업적 정신에 의해 세계시민의 이념이 확대된다는 부분뿐이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경제 체제는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 이전의 경제체제는 정치 영역에 포섭되어 있었고, 정치 영역에 의해 규제당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분리시켰으며, 오히려 사회의 제 영역이 경제 영역에 포섭되도록 하였다. 오늘날의 정치적 결정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기 일쑤이며, 대부분의 사회적 영역은 시장에 포섭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의 체계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부르주아적 소유권이론의 대표자인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을 많이 갖지 못한 이는 도덕적으로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 재산은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인간적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sup>14)</sup>

13) Ibid. 18p. 당시의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그 초보적인 형태이나마 형성되고 있었으나, 독일은 영국에 비해 후진적이었다. 당시 독일의 경제체제를 전적으로 ‘중상주의 경제체제’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역자의 본문 각주 6)번을 참고하였다.

14) C.B. 맥퍼슨, 『홉스와 로크의 정치철학』, 황경식, 강유원 공역, 박영사,

자유와 평등을 선전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의 차가운 논리를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기반을 철저히 파괴시켰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국가 간의 관계란, 더욱 복잡하다. 각 국의 경제적인 여건은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천차만별로 다른 형태를 띠며, 극단적으로 경제적 힘이 압도적인 나라와 극단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존재한다. 경제적인 양극화와 극단적인 빈곤은 자본주의적 자유에 의해 정당화된다. 오히려, 경제적인 힘을 가진 나라는 그를 이용해 타국에 압박을 가하거나, 경제적 힘이 취약한 나라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평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예비조항의 숫자와 항목을 더 늘리는 것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계급 간의 대립 역시 관념적인 형태가 아닌, 현실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이러한 계급적인 대립과 갈등은 분명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태동기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면서까지 자본가를 위해 잉여를 생산해야만 했다. 맑시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상황도 그 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며, 자본가들의 임금삭감이나 무차별한 해고 및 고용 불안정의 상태에 항상 ‘불안감’<sup>15)</sup>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충분히 폭력적이다. 초국적 기업은 제 3세계의 노동자들을 헐값으로 착취하여 그들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는 수많은 빈민들과 노동자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였다. 현실에 존재하는 계급의 문제와 계급투쟁의 문제는 칸트의 체계만으

2002, 4장<sup>1)</sup> ‘로크 : 점유의 정치이론’을 참고하였다.

15) ‘불안’ 및 그로부터 요청되는 ‘예측가능성’은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흄의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영구평화를 고민한다면, 정치 영역만이 아닌 경제 영역에 대한 더욱 진지한 이론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4.2 국제연맹에 대한 논의

국제법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취약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국제 연맹’에 대한 논의가 취약하다면 전체의 이론 체계 역시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연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연맹이 국가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앞서 밝혔듯, 국가와 국제 연맹은 일반의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계약 주체 자신의 권리를 형성된 정치체에 양도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 국제 연맹의 위상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제 연맹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연맹에 대한 논의에는 몇 가지 전제들이 숨어 있는데, 명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연맹의 주체들을 하나의 동등한 힘과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과 2. 국제 연맹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고려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1.번의 전제는 앞서 살펴본 3.2번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그 자연적 힘이 같지 않은 국가들을 어떻게 ‘각각이 똑같은 힘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자’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2.번의 물음은 국제 연맹의 명확한 상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이다.<sup>16)</sup>

또한 국제 연맹은 입법자와 행위자가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방지

16)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모습은 UN(국제 연합)에서 찾을 수 있다. UN의 의사결정기구인 각 국가가 일률적으로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총회와, 총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가지는 안전보장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의는 1.번의 전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까? 모든 국가는 국제 연맹에 기초하여 국제법을 만들고, 동시에 각 국가는 경쟁을 통해 다른 국가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모든 국가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칸트의 구분에 따르면 ‘전제 정제’인 것이다. 물론 국제 연맹에, 국가와 동일한 정치체제의 구분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계를 두어 살펴 볼 것은 법률의 ‘전제적’인 사용 가능성이다. 칸트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을 따름이다.

조금 더 확장된 논의를 해보자. 칸트의 논의를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국제 연맹이라면 UN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유럽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가장 진전된 연맹의 논의와 형태를 보여주는 EU(유럽 연합) 역시 국제 연맹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칸트가 구상한 ‘국제 연맹’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칸트가 구상했던 국제 연맹과 오늘날의 국제 연맹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칸트의 이론 체계 속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로 UN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살펴 볼 것이다.

2차 대전 후 현실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 국가들이 UN을 결성하였으며, 오늘날 UN에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상태이다. UN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역시 ‘평화 유지’ 및 ‘군비 축소’에 있으며, 실제로 2차 대전 후의 전쟁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UN은 헌법이 아닌 ‘국제 연합 헌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국가들의 연맹체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강제력은 없으나 각 국가 간의 견제를 통한 제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칸트의 ‘국제 연맹’과 매우 흡사한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7) EU는 연맹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유럽 공동체의 통합을 지향하는 편이며, 때문에 유럽 헌법 역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제 국가’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는 UN에 국한할 것이다.

UN은 1. 강제력이 미약하나마, 사법권이 존재한다는 점(국제사법재판소를 산하에 두고 있음) 2. 총회 위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존재하여 국가 간의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 3. 국가 간의 실제적인 내정 간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칸트의 체계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1번의 문제는 “국제 연맹에서 사법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 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과 연결할 수 있다. 이에 적극적인 대답을 찾고, 이론적인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은 칸트의 『영구평화론』만 놓고 본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칸트는 입법권과 집행권에 대한 논의는 섬세하게 하고 있으나, 사법권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구평화론』의 현대적인 정당화와 적용을 위해서는, 칸트의 이론 체계가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칸트는 자신의 구상을 단지 ‘철학자들의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가 서문에서 보이는 조심스러운 태도나, 비밀조항에서 붙인 유보적인 조항들은(조항이라기보다는 단지 ‘충고’일 뿐이지만) 철학과 정치 영역의 구분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자신의 구상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진실로 찾아올 수 있음을 강하게 믿고 영원한 평화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도덕 법칙을 존경하며 ‘공법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공법 상태가 실현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면,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헛된 이상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영원한 평화가 급진적 혁명이나, 금지와 규제를 통한 일시적이고 급작스런 변화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영원한 평화

에 대한 의식적인 추구하고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이를 확고히 하는 자연의 보증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평화는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칸트의 이론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이론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더욱 확고한 영구평화의 이론적 정초와 실천을 함께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I. 칸트, 『영구평화론』, 이한구 역, 서광사, 2008  
I.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I.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C.B. 맥퍼슨, 『홉스와 로크의 정치철학』, 황경식, 강유원 공역, 박영사, 2002